

'국회 뭉' 헌법재판관 3석 공백 장기화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해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재판관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여야에서 추천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거란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헌법재판관 인선은 대통령 추천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과 국회 추천 몫 3인으로 총 9명이다. 이중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는 국회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문제의 시작은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 차례 위장진입을 했다는 전력이 드러나면서부터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진입 논란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천 철회 및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추천해놓고 인사청문회까지 했으니 표결을 하지는 것이다.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한국당, 김기영·이종석 후보 동반 사퇴 배수진



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도 과거 주택 청약예금 가입 목적으로 두차례 위장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 후보자도 김 후보자와 '동반사

퇴' 시키겠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당이 극단적인 후보 동반사퇴 카드까지 내민 배경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지명을 강행한 이석태 재판관 문제가 있다는 이

아기가 나온다.

한국당이 이석태 재판관을 반대했던 이유는 김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각각 추천하고 싶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맞바꿔 추천, 즉 '인사거래'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고, 김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때 밑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일한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면서 민주당 후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가 동반사퇴 되더라도 김기영 후보를 내키시게 하겠다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라도 처리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헌법재판관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심재철 논란에 충돌 '자해행위' vs '야당탄압'

여야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에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유용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정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이 파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에 대한 거친 언사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국회를 파비시키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지난달 28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이성적인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어제 심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간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징계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 여권인 김경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폐쇄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미 양측의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만큼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특히 사건의 발단인 심 의원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추가적 폭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나 한국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과 법부수 바른미래당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남제자인 국민들께 알리기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정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정당 중립에 이한다"며 "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항의 방문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경우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에 우리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해 낱말이 밝혀야 한다"며 "지금 초점은 업무추진비 내역이며 국민들은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무리수를 뒤가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와 기재부의 설명은 공색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애당초 국회 보고 감사해야 하는 내역"이라며 "국가기밀이니 국가와 대통령께 안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업무추진비가 그것과 무관 상관없다"고 했다.

사범농단 의혹 '몸통' 수사 탄력

전직 대법관들 첫 압수수색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승태 행정처 사범 농단 의혹 핵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불을 붙였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영환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사범 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및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출신인 서울중앙지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본격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점에 비춰 앞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형식적인 영장을 내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가 아닌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점을 근거로 든다. 현직 시절 사용한 차량이 아닌 민립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의 가치가 과연 크겠느냐는 취지다.

"美에 비핵화·평화의지 전할 것"

민주당 대미특사단 출국

더불어민주당 대미특사단이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 싱크탱크 연구자 등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미특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전 대표는 이날 출국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과 미국 폭스뉴스에서 설파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등을 미국 조야에 널리 이해시키고 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꼭 잡아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 임무를 갖고 다녀오겠다"고 다짐했다.

특사단은 내달 1일, 외교·안보·병전사 등을 연구하는 우드로 윌슨센터 방문 간담회를 갖는다. 조셉 윤 미국 평화연구센터 선임고문과 에이브러햄 덴마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래밍 소장, 진 리 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달 30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미특사단이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손을 흔들며 출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실훈 최고위원, 추미애 전 대표, 김한정 의원, 이수혁 의원.

다음날에는 덴 설리번·잭 리드·브라이언 새츠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고 이후 미국 행정부 인사 및 하원의원과의 면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추 단장 외에 설훈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수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한정 한국역사공공정책센터 소장 등이 구성됐다.

뉴시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Together 광산구